

## 한국, 통상전략은 있는가?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지**금 세계적으로 두가지 유형의 중요한 교역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참여해 교역장벽을 서로 철폐함으로써 물자와 사람 자금 등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다자간 교역자유화이고, 다른 하나는 양국 혹은 인접국가들 사이의 장벽을 제거해 교역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지역주의적 교역자유화이다.

세계무역기구(WTO) 144개 회원국이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구축을 목표로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등 다방면에 걸쳐서 현재 벌이고 있는 '도하개발 어젠다' (일명 뉴라운드) 협상은 바로 다자간 교역자유화다. 각국은 싫든 좋든 국제적 합의를 통해 통상 규범을 수정하고 새로 정하는 다자간 교섭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국가들끼리 자유화를 추진하는 형태로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요즘들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FTA는 관계국끼리 교역장벽의 완화·제거 혜택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자간 자유화 구도에서 모든 국가에게 무차별적으로 동등한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국대우 원칙'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내 교역자유화도 이것이 확산되면 결국에는 전세계의 교역자유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FTA는 일정한 조건하에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인접국가간 지역통합이 증시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FTA 체결에 적극 나서 90년만 해도 137건의 FTA가 체결되었다. 이는 80년대의 11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작년말 현재 세계적으로 총 217건의 FTA가 WTO에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다자간 자유화 교섭에는 어느 국가나 반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각국내 이해집단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양자간 자유화 교섭은 선택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별로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일부 국가들사이의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일이 다자간 통합보다도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미주지역에서는 2005년 출범을 목표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결성이 추진되고, 유럽(EU)에서는 FTA보다 더 강력한 지역통합이 이뤄진 상태이나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중심국가들은 최근까지 FTA와 무관하

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근래들어 일본과 중국이 FTA체결 교섭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양국간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1999년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협상을 벌여 최근 정식으로 양국간 FTA를 체결했다. 이들 두 국가간 FTA 체결을 서두르도록 한 것은 사실은 중국의 행동이다.

중국의 주룽지 총리는 재작년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해 FTA의 체결을 제안했고, 작년 11월에는 10년안에 체결을 완료한다는 기한을 명시해 교섭을 개시했다. 일·싱가포르간 FTA는 일본의 중국 포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올들어 일본의 중국에 대한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얼마전 동남아 각국을 순방하는 길에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ASEAN과 한·중·일, 나아가 오세아니아 대륙까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포괄경제체휴'를 제안했다. 이는 머뭇거리다가는 지역통합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일본측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지역통합 교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점차 외톨이가 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도 'ASEAN 플러스 3(한·중·일)'을 중심으로 지역통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가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진전이 없는 상태다.

1998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칠레와의 FTA 교섭은 사과 배 포도 등의 수입급증을 우려하는 농민의 반대에 부딪쳐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일본과의 FTA는 현재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고 미국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연구결과만 나왔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국제 통상전략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 먼저 필요한 것은 국내 각 집단간의 이해조정이다. 언제까지 농민 등 반대집단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한편에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국제적 조류에 조속히 편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어느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 한다.

이 국가, 저 국가에 산만하게 접근해 봐야 교섭의 실효성만 떨어뜨릴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조선타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쇠국정책으로 일관해 국가가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사실을 회상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에 임해야 한다.

특히 최근 주변국들이 여타 국가와 짝을 짓기 위해 정부 고위층을 중심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만 외톨이로 남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